신안 천일염 중국 수출 '물꼬'

저장성에 3년간 10만t 협약

신안 천일염이 미국에 이어 중국 수출길 에 오른다.

전남도는 25일 신안군청에서 신안군, 중국 저장성 주산원동수입해염제품책임 유한공사와 3년간 10만t 규모의 천일염 수 출 협약을 체결했다.

이날 협약에 따라 신안 천일염은 첫 물 량으로 가공염 20TEU(20피트 길이의 컨 테이너), 약 5만3000달러 어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앞으로 3년간 10만t을 수출할 예정이다.

전남도는 지난 4월 중국 현지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를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여 이들 바이어를 신안으로 초청,

비금도 현지 시찰과 실무협의를 거쳐 협약 을 맺게 됐다.

앞서 지난 7월에는 신안군 임자면 천일 염 생산업체 마하탑이 천일염 2.6t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수출했다. 마하탑은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얻으면 연간 50t 이상 수 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전남지역 천일염 생산량은 2016년 기준 29만3000t으로 전국의 79%를 차지하고 있으나, 최근 천일염 가격 하락으로 생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업계에서는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천 일염 수급 조정과 폭락한 가격이 안정되기 를 바라고 있다.

천일염은 저염식 문화 확산 등으로 소비 세가 정체된데다, 가뭄·폭염으로 생산량 이 크게 늘어 가격이 폭락했다.

천일염 가격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수 요가 폭등했던 2011년 20kg들이 1포의 평 균 가격이 1만1222원에서 지난해 3200원, 올해 2477원으로 6년 전 대비 22%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. 생산원가가 6000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판매가격이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해 영세 생산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 고 있다.

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"최근 중 국과의 외교 갈등 상황에도 이같은 수출협 약을 맺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"이라며 "앞으로도 상호 꾸준한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 분야도 수출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" 고 밝혔다. /박정욱기자 jwpark@



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명수(오른쪽)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.

"국민은 정치도,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"

문 대통령,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

문재인 대통령은 25일 "지금 국민은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"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한 자리에서 "사법부 수장에 혹시라도 공백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국회와 야당 이 3권분립 정신을 존중한 덕분에 공백 없이 취임하시게 돼 다행"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

문 대통령은 "정치 개혁은 대통령·정 부·국회가 감당할 몫인데,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 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써 국민과 사 법부 내부에서 신임 대법원장께 기대가 큰 것 같다"고 언급했다. 그러면서 "청문 회 때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 아주 든든하 게 생각됐고 모든 사안에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시면서도 침착하셔서 저도 기대된다"고 덧붙였다.

김 대법원장은 "대내외적으로 여러 가 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 린다"며 "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고, 사 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,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 재한 수석·보좌관회의에서 "엄중한 안 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・ 야·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생 산적인 정치를 펼치는 방안에 대해 지혜 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"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"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 는데 국민께 국가적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 면 좋겠다"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무수 석을 직접 호명, "내실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"고 주문했다.

이는 여야 5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계 기로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아 안보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0.2㎢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

전남도는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0.2㎢ 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 일 밝혔다.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 년간이다.

상포지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시 관리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곳 으로 개발 목적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.

전남도는 또 담양군 담양읍 첨단 문화 복합단지 조성지 7.78㎢에 대해서도 1년간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. 이곳은 2014년 10월부터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 정됐다.

담양군 등은 2020년까지 전원주택 772 가구, 공동주택 680가구 등 주거·상업시 설을 조성할 계획이다.

전남도 관계자는 "부동산 투기를 방지 하고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아 건전한 부 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다"라 며 "부동산 거래 동향을 수시로 살펴 토지 거래 허가구역 대상지가 있는지 파악하겠 다"고 말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귀농·귀촌 100명 중 7명 '역귀농'

영농 실패·자녀교육 등 영향

귀농·귀촌인 100명 중 7명이 도시로 돌 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농촌진흥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구축한 귀농·귀촌 패널 1039명 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추적 조사한 역귀농·귀촌 실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.

조사 결과 귀농·귀촌인의 88.8%가 농 촌에 정착해 살고 있고 6.8%는 도시로 돌 아갔는데, 역귀농 이유로는 '영농실패' (43.5%)가 가장 많았고 이어 '일자리'(17. 4%), '자녀교육'(13.0%), '건강'(13.0%) 등

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는 2차 귀농·귀촌 비율은 4.3%였다. 이들은 '품목 변경', '농 지 주변으로 이사', '농지 획득' 등 더 나은 영농여건을 찾아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

귀농·귀촌인의 연령대별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'40세 미만'의 젊은 귀농·귀촌인

■ 역귀농 이유



일수록 계속 거주(8.0%)나 도시로의 이주 (5.4%)보다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(24.4%)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2030 세대 귀농·귀촌인은 중·노년층과 달리 농촌정착에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도 시로 돌아가기보다는 다른 농촌으로의 2 차 이주를 시도함으로써 농촌에 정착하려 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.

/연합뉴스

'복마전 아파트 분양시장' 1면서 계속

'점프통장'은 외부의 '떳다방 세력'이 주 택청약종합저축을 300만~500만원에 구 입한 후 3개월 전에 광주로 전입,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 집중적으로 '작업'에 나서 는 것을 말한다. 하남3지구, 동구 용산지 구, 남구 효천지구 등이 대표적이다.

이 경우는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 우선 그 대상이 된다. 외부 떳다방-지역 떳다 방-지역공인중개사로 아파트가 넘어가면 서 프리미엄이 최대 1억원에 이르게 된다. 5~10명이 한 팀을 구성해 분양회사로부 터 아파트 세대수의 절반을 받는 사례도

있다는 것이 한 공인중개사의 증언이다.

광주의 김○○씨는 분양아파트마다 나 타나 100세대 이상씩 사들이는 것으로 유 명하다. 부동산계약서 원본을 현금거래하 는 방식으로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도 불 법거래되는 등 광주 아파트 시장은 온갖 불법과 탈법이 뒤섞여 있다.

투기세력들이 새 아파트를 싹쓸이하면 서 집없는 서민이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'하늘의 별 따기'가 되고 있는 것이다.

무주택자들은 6개월마다 재당첨이 가 능해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, 특정지역 거주자들이 아파 트 분양권을 독점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

광주의 한 아파트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 과 수완지구 거주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선 경우도 있었다고 A건설업체 관계자는 털어놨다.

건설업체, 분양회사, 공인중개사 등도 모두 이 불법・탈법 청약시스템을 어느 정 도 인정하고 있다.

B건설업체 분양 관계자는 "광주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, 신규 수요가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, 광주의 청약률은 이 상하게 높다"며 "시장에 투기세력이 개입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 다"고 말했다.

국가교육회의장에 신인령 전 이대 총장 저출산·고령화사회위 부위원장에 김상희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에 장병규씨 임명

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, 4차산 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,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.

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의 법학자이자 대학 총장을 역 임한 교육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륜과 깊 은 학식을 겸비하고 있어 교육 분야의 현 안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할 적 임자라는 평가다.

대구 출신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

회 위원장은 20대에 창업한 네오위즈를 시작으로 첫눈, 블루홀 스튜디오, 배틀그 라운드 등을 연속으로 성공시켜 IT업계 의 '미다스의 손'으로 불리는 국내 IT업 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스타트업 기업 인들의 우상이다.

김상희 저출산·고령화사회위원회 부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성과 환경 ·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성을 축적한 적임자로 여성 인권보호와 남녀 고용평등,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 해 노력해왔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광주시, 9월분 재산세 납기 10월 10일까지 연장

광주시는 애초 30일까지인 9월분 재산 세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연장

또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 소득세(특별징수분), 주민세(종업원분),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은 13일까지 연 장한다.

광주시는 25일 "오는 10월 2일 임시공 휴일 지정과 장기간 추석연휴로 인해 지방 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은 연장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

추석 연휴 중에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 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, 현금카드, 신 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.

.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 차용증·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

- ▶ 절대 선수금, 출장비용 없음 ◀
- 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- 채무자 재산, 신용·주거래은행·차량등 파악
- 실거주지파악가능
-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
-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

▶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◀

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.

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(24시간 상담가능)

새한신용정보(주)

010 - 6833 - 1600 직통전화 062)513-4306

대형토지

- 빛그린산업단지 인근
- 문장공용터미널 근접
-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
- 개발가능 생산녹지 5,000평
- 가격: 저렴하게 협의

H. 010-5236-7458



062) 655-6544 (광주 남구 진월동 252-4 우리은행건물 3층)